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회계기준 위반 내부감사에 과징금 부과... 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사(회장)에게 6억9천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천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천610만원, 전 감사에게 1천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 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사가 회계부정을 예방하지 못했어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제외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배제됐다.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도 받도록 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 양 측에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각각 나왔다. 이 중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면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관련 검사로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표결 없이 처리됐다.

지방세, '애매한 종부세' 과세체계... 보유 형태→보유 가격 기준변경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종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상위 2%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시됐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유세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